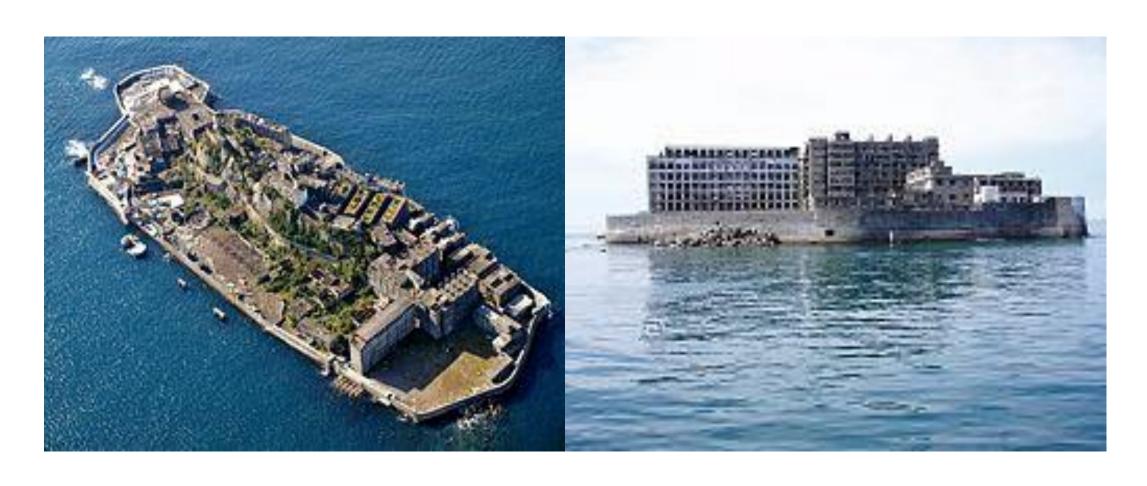
군함도와 사도탄광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군함도/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2015)



1.군함도/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2015)

- 2015년 7월 5일, 제39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토 구니유네스코 일본대사 발언 "1940년대 일부 지역에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한 많은 한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정부는 징발정책policy of requisition을 시행했다"(유네스코 홈페이지 발언록 영문)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 제강, 조선, 석탄산업의 유네 스코 세계유산 등재

영화 군함도(2017)/나가사키 하시마 탄광



니가타 현 사도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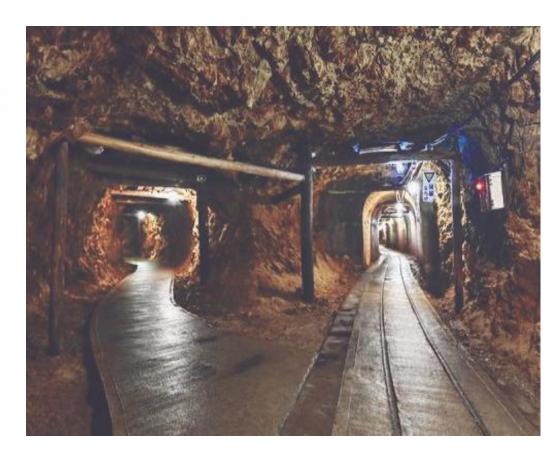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사도광산



사도광산 역사

1601년	금맥 발견 이후 에도시대에 중요한 재원 역할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인수
1918년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가 관리권 인수
1939년 이후	조선인 1200~2000명 강제 동원 본격화
1942~1945년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 확보에 활용
1989년~	폐광 후 현재 관광지로 운영 중

The JoongAng



2.강제동원 역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점

- 식민지 조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환경' 하에서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 사실을 분명히 표현할 것 요청
-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의 결정-군함도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기 록할 것 vs 일본은 1850~1910년간 일본 메이지 시대 근대 산업 혁명 유적으로 한정하여 등재 시도
-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도 **강제노동 관련 근거를 제시할 필요** 있음.

2.강제동원 역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점

- 2023년 11월 22일,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됨.
- 아시아국 공석 1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통산 4번째 (1997~2003, 2005~2009, 2013~2017, 2023~2027) 로 WHC에 진입.
-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 배정. 임기는 규정상 6년이지만, 관례상 4년만 활동하고, 다양한 국가 참여를 위해 연임 자제
-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 심사, 선정 및 등재 유산 보호 활 동

2.강제동원 역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점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佐渡) 광산 등 재를 막을 수 있을 가능성 확대되었으나, 2024년 7월 결국 등재 됨
- 2015년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관리 현황 심사 가능.
- 일본은 2021~2025 위원국 활동

3.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발생의 배경

- 1) 징용
- 1931년 만주사변,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도 발
-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 1939년 7월 '국민징용령'
-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강조, 한글사용 금지, 일본어 상용, 신사참배·궁성요배, 창씨개 명 강요, '일본정신 발양주간'=> 조선인의 민족성 말살, 일제 침략전쟁에 참여 독려
- 저축보국 주간, '애국공채' 강매로 전쟁비용 조달

3.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발생의 배경

- 전쟁물자, 인력 조달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도 국가총동원법 적용, 국민총동원연맹 결성
- 조선인에게 징용(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挺身隊), 군위안부 모 집, 육군특별지원병제, 징집제, 학도지원병제 실시
- 1942년 2월 23일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각의 결정
- 1944년 8월 8일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 각의 결정, 9월부터 시민지 조선에서도 '국민징용령' 본격 발동 => '징용'을 통한 조선인 노동자 동원(일본 국내 탄광, 비행장, 군수공장, 사할린, 남양지역 일대)

3.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발생의 배경

모집 형식의 문제(관官 알선 방식)

1944년 9월~조선총독부 지시 아래 행정 및 경찰 당국 '강제' 동원 방식

- * '강제성'의 개념=신체적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구속, 회유, 설득, 임의 결정, 취업사기, 법적 강제의 의한 동원 의미
-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면 '본인의 의 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강제성의 핵심
- "강제란 육체적 정신적 강제를 포함하며, 이 개념은 19세기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 초에는 국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규정(2002년 일본 변호사협회 조사보고서)

3.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발생의 배경

- 한국 현행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등의 피해(제2조 제1항) "
- 군수산업(탄광, 군수공장 등) 배치, 열악한 노동환경(ex:군함도)
- 저임금(일본인 노동자의 절반), 강제 저금(급여 미지급), 탄광 사고 (사망, 부상 등)

3.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발생의 배경

- 강제동원 피해자 수 66만 684명(1945년 9월, 일본 후생성 노동국 '조선인 집단이입 상황조사')
-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1965년 한일협정)
-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 불인정/합법지배론

3.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현황

- 공식 인력 피해 총 780만 4,376명(2015년 강제동원조사위; 중복 동원 포함 연인원, 군위안부 불포함)
- 징병 피해자 209,279명(육군특별지원병 16,830명, 학도지원병 3,893명, 육 군장병 166,257명, 해군 지원병 포함 22,2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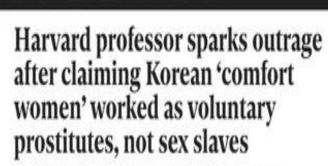
- ⇒ 현재 한국정부 확보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180만 건 중(중복 인원 포함) 북한지역 출신 피해자 최소 23% 남북 공동 대처 방안
- ⇒ 물적, 자금 피해 1949년 2월 한국정부 추산 314억97만5,303엔

I CAN SPEAK!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The journal suspended its issue which carried Ramseyer's article following an uproar



Harvard professor sparks fury after claiming Japan's 'comfort women' CHOSE to be prostitutes, in new paper

- J. Mark Ramseyer, the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the Ivy League school, has angered people worldwide
- His article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was scheduled to be published this month but the issue has been cancelled
- The professor argued the women willingly entered into contracts as sex workers
- His paper has since intensified a political dispute between Japan whose leaders have denied that the women were coerced
- Lee Yong-soo, a 92-year-old South Korean and survivor, described Ramseyer's assertion as 'ludicrous' and demanded he apologize

- 한일 과거사 갈등의 뇌관-일본군 위안부 문제
- 한국 측 사과와 보상 요구 vs 일본의 강제성 부인
- 국제사회 여론: 램지어 교수(하버드 로스쿨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규탄(ex 매춘 계약서 존재 여부 증명)
- UN 1996년 보고서 '위안부는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강압으로 끌 려간 성노예'
- 이용수 할머니, ICJ 국제사법재판소(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적 해결 모색)





파친코(2022)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Despite this, the People endured

• www.hermuseum.go.kr(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



'만삭의 위안부'(고 박영심 할머니)-2 차대전 말기(1944년 8월~ 9월) 인도 차이나 전선(중국과 미얀마 국경지 대)에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는 동 영상(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자료)

- 1990년 5월 18일, 여성단체연합 등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앞서 '정신 대' 문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 요구
- 1990년 6월 6일 일본 참의원 의원, "강제연행 중 종군위안부 사실 " 질의
- <= 노동성 당국자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다던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 불가능..." 답변
- <= 1991년 9월 14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복순 할머니 피해 증언
- 1992년 1월 8일 수요집회 시작,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사과, 교육 요구

- 정신대(挺身隊)=국가(천황)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 라는 뜻. 병력 혹은 노동력 동원의 '자발성' 강조
 - ex)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노무동원
- 종군(從軍) ex) 종군기자, 종군간호사
- 일본 우익 교과서-'종군'위안부 삭제 운동. 이른바 '종군'위안부
- UN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보고서-Comfort woman이 아닌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cf. enforced sex slaves(힐러 리 클린턴)
-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인권유린

- 일본정부(군)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
-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명
- 군 위안소 설치에 관계한 일본 군 문서
- 군의 후방시설 하나로 설치(1937년 9월 29일 야전주보규정)
- 민간인 업자가 위안부를 모집하기도 했으나, 업자 선정과 통제 는 일본군과 정부
- 일본 육군성 작성 '군 위안소 종업원 모집에 관한 건'(1938.3.4)
- 1938년 1월 중국 상하이 육군위안소 규정

위안소규정

1. 본 위안소는 육군 군 인 군속 외에 입장을 허 가하지 않는다. 입장자 는 위안소 외출증을 소 지할 것

• • •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 양 일대 설치



- 일본정부 입장-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일본 위안부 문제 종결 주장
-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 반발 및 국민여론
- 2018년 8월 30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일본정부에 피해자 중심 대응, 지속적 해결노력 권고
- => 한일 간 외교 이슈, 여성 인권 문제, 피해자의 명예 존엄 회복 과제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팽창주의를 추구하던 일본 제국주의가 낳은 필연적 산물(강정숙, 일본군 ' 위안부 ' 알고 있나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 2015)
-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하부구조로서 가부장적 남존여비 구조
- -> 여성의 종속과 희생 강요
- 식민지 민에 대한 차별
- 누가 강제동원 피해의 대상이 되었나(민족 내부의 문제)
- ->전쟁과 인권의 문제(피해자 중심주의)